

# 文 “좋은 일자리 만드는 주연은 기업… 정부는 조연”

(문재인 대통령)

## SK하이닉스 공장서 일자리추 회의

측면 지원 ‘서포터 타워’ 역할 강조  
대기업-중소간 상생 생태계 당부

민간투자 프로젝트 총 141개 지원  
4년 내 일자리 10만7000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일자리위 이목희 부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미래차,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주연, 정부는 조연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가 이날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발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총 141개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각각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

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부처간 칸막이 없이 윈윈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의 경우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선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서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가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해 4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 과정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이루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소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 “1.1조 들인 산업부 R&D… 성과는 ‘글썸’”

### 중기중앙회 남북경협 인식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절반 이상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출 희망 지역으로는 개성, 평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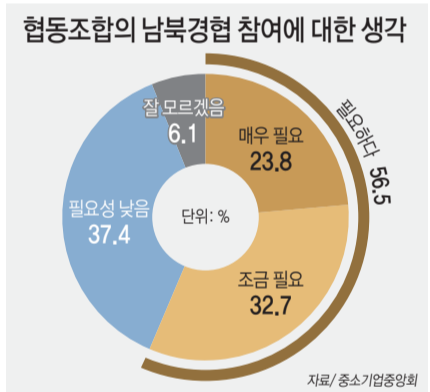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14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10곳 중 6곳(56.5%)은 남북경협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한의 ‘서해 경제벨트’를 선호했고, 특히 개성(48.1%), 평양(27.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남북경제협력 방식으로는 개성공단과 유사한 북한 내 근로자 활용(39.3%), 북한 인력을 활용한 위탁가공무역 협력(28%), 제3국에서 북한 인력활용(6.1%) 등 북한 인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방식의 선호도(73.4%)가 높았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필요한 분야 및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각각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10개사 중 7개사(67.8%)가 남북경협 참가 시 예상되는 리스크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같은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꼽았다.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높게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 여기구 더민주 의원 R&D 성과평가 최하위권 기록 “산업부 성과를 제고 대책 시급”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도 하반기 국가 연구개발(R&D) 종료 및 추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를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등 3개 사업의 평가점수는 각각 73.1점, 75점, 76점으로 평가대상 정부부

처 사업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이번 평가는 2016년 종료된 7개 부처 11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3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로 나뉘 이뤄졌는데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종료평가,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은 추적평가 대상이었다.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524억원,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5335억원, 헬기기술자립화사업 4643억원 등 총 1조1502억원으로 이는 과거정통부 5개 사업 2조 4791억원, 교육부 1개사업 1조 7960억원에 이어 8개 정부부처 중 3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쓴 것이다.

종료평가의 경우, 과기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91.0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안부의 ‘국민안전화보기술개발’ 89.1점, 방재실험시설구축 83.8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 81.5점, 환경부의 ‘환경융합기술개발’ 81.1점 순이었으며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11개 사업 중 9위로 평가됐다.

여 의원은 “국가R&D사업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산업부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R&D사업의 성과를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자영업 57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0.3%

### 김규환 한국당 의원

6년전 2만명서 1만7998명으로 줄어

우리나라 전국의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0.3%에 불과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25.4%로 OECD 39개국

중 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 573만명 중 0.3%인 1만7998명에 그쳤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2년 2만명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1만7998명으로 가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의원은 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5년 이내에 폐업한다며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인 59.1%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창업 10곳 중 7곳 5년내 망한다… OECD 평균 못 미쳐

### 김규환 한국당 의원

예술·숙박·음식업 폐업률 더 높아

정부가 창업에 예산이나 정책을 ‘올인’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지 5년 안에 10곳 중 7곳이 문을 닫고, 특히 예술·여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은 10곳 중 8곳이 5년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계형 창업도 주요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두 배 가량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4일 내놓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의 5년차 폐업률은 7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인 59.1%를 훌쩍 뛰어넘었다.

###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5년차폐업률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58.2	42.1	29.6	24.5	16.8	83.2
숙박음식점	59.5	42.3	30.2	23.5	17.9	82.1
사업지원서비스	57.4	45.5	35.8	28.1	22.5	77.5
도·소매	58.8	45.4	35.5	29.5	24.2	75.8
교육서비스	61.3	48.1	38.6	31.4	24.4	75.6
출판·영상·정보·서비스	63.1	48.7	40.4	36.6	27.7	7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76.5	59.8	47.0	41.8	29.87	70.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5.8	55.7	46.1	38.0	34.5	65.5
제조업	70.1	59.4	49.9	43.7	38.4	61.6
한국	62.7	49.5	39.1	32.8	27.5	72.5
OECD 주요국 평균	81.7	66.8	54.7	47.2	40.9	59.1

\*OECD는 2012년 기준. 한국 기업생멸행정통계(2012~2016). /자료=중소벤처기업부·국회 예산정책처

5년째된 창업기업이 살아남은 비율(생존률)이 고작 27.5%인 셈이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5년차 생존률은 16.8%, 숙박·음식점업의 같은 기간 생존률은 17.9%로 다른 업종보다 폐업이 잦았다.

그나마 제조업의 5년차 생존률이 38.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이 역시 OECD 주요 나라의 5년 생존률 평균인 40.9%보다도 낮은 모습이다.

/개종=최신용 기자